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장엽
정순관**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내용과 이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동화주의 성향을 보이는지, 다문화주의 성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적응,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등 다문화가족정책 영역별로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외국 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을 분석하였고, 지역주민 396명과 결혼이민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추진과제의 비중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가 비슷한 반면, 정책영역별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주민과 결혼이민자들의 전체적인 인식은 다문화주의 성격을 보인 반면, 정책영역별로 보면 이주적응, 고용, 복지는 다문화주의로, 문화는 동화주의로, 그리고 교육은 지역주민은 다문화주의로, 결혼이민자는 동화주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정향성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제어: 다문화가족정책,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1. 서론

지난 수세기 동안,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사회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 세계 184개국 중 아일랜드와 함께 단일문화를 고수해 온 유일한 나라로 분류되어 ‘한 핏줄 한 민족 한 문화’로 대표되어 왔다(오경석 외, 2007). 하지만 체류 중인 외국인인 1990년에 약 5만 명 수준에서 2012년 말(법무부 기준) 약 140만 명(전체인구의 2.8%)으로 지난 20년 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이질적 문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마주쳐 있다.

오늘날의 한국은 문화나 생활양식에서 이질성이 매우 높은 다문화사회로 이미 바뀌진 상태이다(정홍익 외, 2007: 10).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라는 말이 나

* 이 글은 박사학위논문(2014, 정장엽)을 재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오기 이전인 90년대까지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혼혈아’라고 하여 대부분 정체성 혼란에 괴로워하며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에도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리틀 싸이’ 황민우의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한국인이 다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정착되었거나, 한국인과 동등하게 여기는 동화주의가 정착되었다면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문화정책을 유형화한 대표적인 학자들인 Castles & Miller(2003)는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에 따라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분류하였다. 차별적 배제주의란 소수인종에 대한 효용을 정책적 배제로 대응하는 주의이며, 동화주의란 소수인종을 주류사회의 핵심가치로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이다. 다문화주의란 소수인종의 고유문화를 지켜가고 인정해주는 주의이다. 이들은 한국을 독일,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과 함께 차별적 배제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들이 한 국가를 분류하는 거시적인 척도여서 한 국가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들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 국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자체를 측정하여 분류할 수 있는 적합한 척도나 지표가 요구된다. 또한 Castles & Miller(2003)가 제시한 차별적 배제주의가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없다. 개념과 사례를 기반으로 공은숙(2009) 등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동화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을 가진 선진 국가들의 정책에도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동화주의로 분류된 프랑스의 경우도 지난 2005년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요’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말미암아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와 통합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동화주의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재 동화주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 그런데 한 국가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동화주의인지 다문화주의인지 통째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며(김태원·김유리, 2011; 한승준, 2008),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중 노동시장에서는 차별배제주의가, 사회정책영역에서는 동화주의가,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이영범·남승연, 2011), 따라서 영역별로 정책의 성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실행된다. 다문화가족정책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정책의 수혜자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 간의 연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인식, 정책의 수혜자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추진과제를

1) 2003년도 Castles & Miller의 연구에서 한국을 차별적 배제주의로 제시하였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 관련 법들의 제정을 비롯해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다문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을 차별적 배제주의라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에서 제외시켰다.

비롯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수혜자인 결혼이민자들이 동화주의 성향과 인식을 보이는지, 다문화주의 성향과 인식을 보이는지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밝히는데 있다. 이는 중앙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성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이해관계자와 수혜자의 인식간에 차이(gap)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다문화가족정책의 개념

‘다문화’라는 것은 기존의 단일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나의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 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혼재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문화가 존재하는 사회가 ‘다문화사회’이다. 2000 년대에 들어오면서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2008년도를 기점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으로 통일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다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공은숙, 2009, 33).

‘다문화가족’은 기존의 인구집단과는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등을 통칭한다(김태원·김유리, 2011).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보면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4개국 출신이 전체 결혼이민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다문화가족정책이란 다문화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통칭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주류 또는 다수집단과 다른 비주류 또는 소수자 집단의 차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오경석 외, 2007: 26)으로 주로 다문화가족과 소수인종의 사회적 권리를 다루는 정책적 노력이 다(마르티니엘로, 2002).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정책들과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홍기원, 2009; 170~171). 첫 번째 근거로 다문화가족정책은 ‘관점’ 지향적 정책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 근거로 다문화 정책이 다소 추상적 개념 체계인 ‘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정책이 문화라는 개념이 갖는 확장성과 유동성에 기대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정책개입²⁾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2) 캐나다의 경우 대외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인가? 또한 정책에서 관점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러한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 주체 혹은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확보 될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동화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다문화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등 무수히 많은 고려 요인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고려 요인들은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이란 정책의 추진 주체자 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민간단체 등을 비롯해 정책의 이해관계자, 정책의 수혜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과제이다.

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동화’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동화 정책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동화주의이다. 동화주의란 한쪽이 다른 한쪽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을 기대한 일반적 통합정책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화주의란 “다문화가족이 국민됨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다문화란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을 의미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란 용어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동화주의를 대신하여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조현상, 2009).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마르터니엘로 2002: 88).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향상과 문화가치의 실현을 인간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란 “다문화가족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표 1>에서와 같다.

<표 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특성 비교

구분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기본방향	• 국민 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함	•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려함
정책목표	•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 소수집단의 고유성 인정을 통한 사회통합
정체성	• 동질화	• 이질화
국적부여	• 숙지주의 • 용이한 조건	• 숙지주의 • 이중국적 허용
정주화	• 비교적 가능	• 가능
국가역할	• 제한적 지원	•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한 인정 • 노동력, 이방인 • 통합의 대상	• 상호존중과 관용 • 사회구성원 • 사회 다양성의 원천
평등개념	• 기회의 평등	• 결과의 평등

갈등해소 방안	•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갈등해소	•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해소
정책수단	• 소수집단 차별방지의 법제화(소극적 수단)	• 소수집단 문화와 권리 보호의 법제화(적극적 수단)
문화적 지향	• 문화적 동질화 추구 • 추상적인 타문화 이해와 수용	• 문화적 이질성 존중 • 구체적인 타문화 인정과 보호
다양성 개념	• 사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 사적, 공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비판	• 동화의 현실적 어려움 • 이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배제	• 민족정체성 약화 • 사회적 분열 초래
장점	• 동화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성 배제	• 인류 공존과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

자료: 박진경·원숙연(2010), 한승준(2008) 재구성

3. 다문화가족정책의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역사는 짧다.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 인문과학 논의에서 시작되어(정명주, 2012), 행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사회과학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학에서의 연구경향도 다양한 갈래로 나타나는데,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다문화사회의 소수자정책에 대한 연구로서 전영평(2008), 최무현(2008), 원숙연(2008) 등의 연구, 새로운 정책모형을 제시한 지중화·정명주·김도형(2009)의 연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로서 유도원(2012), 배성호(2013), 하선자(2013) 등의 연구, 다문화 정책의 정향성과 관련한 원숙연·박진경(2009), 박진경·원숙연(2010), 박진경(2010), 박외병·임준태(2013)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다문화정책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정향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와 함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인지 다문화주의인지를 규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Castles & Miller(2003)는 한국을 차별적 배제주의로 규정했으며, 김선화(2009)와 공은숙(2009)은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동화주의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선화(2009)는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특성, 정착지원과 내용과 거주보호 단계,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경향을 다문화주의 지표와 동화주의 지표로 나누었다. 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계량적 측정 없이 내용분석을 하였다. 공은숙(2009)은 다문화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제정 및 개정된 관련법을 근거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동화주의로 정의하였으며, 전주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분석 한 후 동화주의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김선화(2009), 공은숙(2009) 등의 연구 모두 실증적 분석이나 계량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또한 Castles & Miller(2003)의 분류에 유형인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도 있다. 박진경·원숙연(2010)은 중앙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진보적 이념, 단일민족 지향성, 인종적 조건, 시민적 조건, 다문화사회 지지, 다문화사회 위협인지, 연령 등이 차별적 배제, 동

화주의, 다문화주의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동화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보적 이념, 인종적 조건, 시민적 조건, 연령, 다문화사회 지지, 다문화사회 위협인지 등 이었으며, 다문화주의는 단일민족 지향성, 다문화사회 지지, 다문화사회 위협인지 등 이었다. 임동진·박진경(2012)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을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이주민의 기여요인, 사회 환경 요인, 위협요인)와 인구 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신분: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 집단 등)이 차별적 배제 정책, 동화주의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성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동화주의 정책성향에는 이주자의 사회 환경 요인만이, 그리고 다문화주의 정책성향에는 이주자의 사회 환경 요인, 이주자의 위협요인(-), 학력, 신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박진경·원숙연(2010), 임동진·박진경(2012) 등의 연구가 영향요인을 찾는 연구라면 박외병·정명희(2012)의 연구는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인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모두 다문화 수용성인 관계능력, 공감,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와 같은 다문화정책의 정향도 정책의 영역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연구들도 있다. 김태원·김유리(2011)는 Castles and Miller(2003)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연구에서 Castles & Miller(2003)의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국가마다 사회통합모델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정향성과 목표 등은 상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등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주목하여 그 중심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들의 문제는 자녀와 배우자 등과 연계됨으로 외국인 정책과는 별개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언급하였다. 한승준(2008)은 프랑스 동화주의의 위기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영역을 이주(시민권 및 국적 획득 절차의 엄격성, 이주민관리의 엄격성), 교육(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 채택수준, 소수인종 언어교육의 수준), 고용(차별 없는 고용의 수준,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고용조치 수준), 문화(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의 수준, 대중매체에서의 인종대표성 수준)로 구분한 후, 이들 영역별로 프랑스의 동화주의를 분석하였다.

김태원·김유리(2011), 한승준(2008) 등의 연구와는 달리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누는 것에 회의적인 주장도 있다. 정명주(2010)는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동화주의인가? 다문화주의인가? 라는 논의를 포함시켰다. 그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정책 방향이 동화주의냐 다문화주의냐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한 국가 내에서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동화주의를 채택하느냐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느냐를 논의하는 것도 무의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계량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질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해 명확히 논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요인의 변화에 의해 정책도 변했음을 입증해 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영범·남승연(2011)은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민자통합정책지수 6개 영역(노동시장접근성, 가족재결합, 장거리거주, 정치참여, 국적접근성, 차별금지), 영역별 4개

하위차원(이민자비율, 우파정당 의식점유율, 1인당 GDP, 제조업/농업/서비스업 종사자비율)을 가지고 17개국을 Cluster분석하여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Castles & Miller (2003) 연구에서 분류한 기준과 다르게 나온 나라들이 있었다. 비록 측정지표가 다르지만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화주의적이었는데, 온건한 다문화주의로 나타나는 등 두 연구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표 2>에서와 같다.

<표 2>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연구자	연구주제	방법	결과
Castles & Miller (2003)	이민의 시대: 현대사회의 국가별 인구이동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인 5개 지표로 다문화주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구분 한국을 차별적 배제주의로 규정
김선화 (2009)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점에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표로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용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주의가 근간을 이룸 교육정책만은 다문화주의
공은숙 (2009)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의 다문화 개념, 사업, 전주 시 사례 등의 특성들로 다문화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정책이라는 개념 및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은 동화정책을 행한다고 봄
박진경·원숙연 (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독립변수(진보적 이념, 단일민족 지향성, 국민됨조건, 접촉경험)-매개변수(다문화지지, 위협인지), 종속변수(차별적배제, 동화, 다문화)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주의에는 위협인지가, 다문화주의에는 다문화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와 정책 성향을 집단별로 차이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임 다문화주의정책의 성향은 동화주의 → 다문화주의 순 공무원 차별배제주의 선호 고학력, 전문가 다문화주의 선호
김태원·김유리 (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해 국가별 사회통합수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정책유형 분류는 무의미 한국형 다문화주의 수용 논의 필요성 강조 주류사회로의 일방적 동화가 아니라 쌍방향 수용 강조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이주, 교육, 고용, 문화 영역별 다문화정책 지표를 개발하여 내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동화주의정책 2005년 이후 부분적인 배제모델 및 다문화주의 모델의 채택 과거에 비해 이주민의 존재 공식적으로 인정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강제성과 직접성 기준으로 이민, 고용, 교육, 문화, 복지 정책별로 1차 기본계획을 계량적으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강제적, 부정적 수단에서 비강제적, 긍정적 수단으로 이동 이주의 체류관리, 고용의 단순 기능 인력은 관리 감독적 차원에서 강제적, 직접적 정책수단이 활용 됨 결국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포용과 수용의 방향으로 동화주의보다는 다문화주의의 실험적 단계수준 임
이영범·남승연 (2011)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MIPEX(이민자통합정책지수)로 17개 국가를 4개 유형으로 분류. 실증적, 귀납적 방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를 다원주의적, 발전주의적,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으로 분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의 필요성 언급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첫째, Castles & Miller(2003)가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을 지표로 국가를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거시적인 지표로 실제 한 국가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들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 국가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이 동화주의인지 다문화주의인지에 대한 적합한 척도나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어떠한 국가가 동화주의인지 다문화주의인지를 측정하는 지표와 측정 시기 간 차이는 있었지만 이영범·남승연(2011)의 연구 결과와 Castles & Miller(2003) 연구결과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한승준, 2008)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정책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현재의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Castles & Miller(2003)가 주장 하였던 차별배제주의 인지, 공은숙(2009)이 주장한 동화주의 인지를 계량적 접근방법을 통해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김태원·김유리(2011), 한승준(2008) 등의 연구에서처럼 한 국가의 다문화정책을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나로 통째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영범·남승연(2011) 등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증적 분석을 근거로 언급 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차별배제모형이, 사회정책영역에서는 동화주의모형이,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모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승준(2008), 정명주(2010) 등의 연구처럼 이주,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등과 같이 관련 정책을 영역별로 나누어 다문화가족정책의 성향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표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고려사항

선행연구	시사점	고려사항
Castles & Miller(2003)	•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에 따라 구분한 기준	• 한 국가 내에서 다문화정책을 분류하는 지표가 필요함
Castles & Miller(2003), 한승준(2008), 공은숙(2009), 이영범·남승연(2011)	• 국가의 다문화정책은 변함	•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어떠한 성격을 보이는지를 계량적 분석이 필요함
김태원·김유리(2011), 한승준(2008), 정명주(2010), 이영범·남승연(2011)	• 국가의 다문화정책을 통째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에도 노동시장에서 차별배제모형이, 사회정책영역에서 동화주의모형이, 교육·문화정책의 영역에서 다문화주의모형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 이주,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등과 같이 영역별로 나누어 다문화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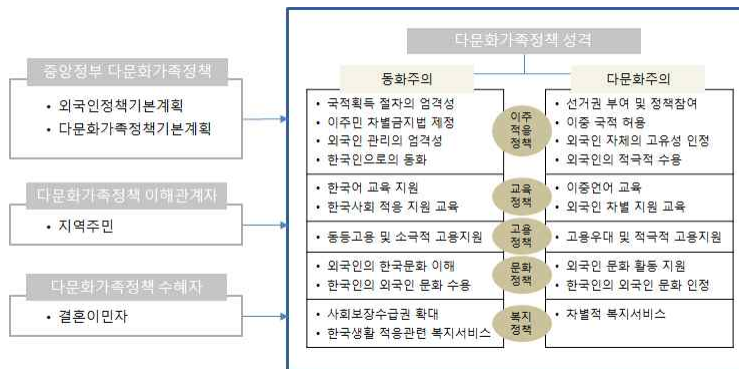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원-분석수준-정책영역으로 나누어 다문화가족정책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차원은 Castles와 Miller(2003)가 제시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누었다. 동화주의 반대가 다문화주의로 볼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차이가 있다. 이에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한 개의 축, 즉 동화주의가 높아지면 다문화주의가 낮아지는 논리보다는 동화주의라는 축과 다른 다문화주의라는 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분석수준은 조직수준인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집단수준인 다문화가족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그리고 개인수준인 다문화가족정책의 수혜자인 결혼이민자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영역별로 나누었다. 한승준(2008), 정명주(2010)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 교육관련 다문화정책, 고용관련 다문화정책, 문화관련 다문화정책, 복지관련 다문화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연구 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탐색연구를 위한 연구 과제를 설정해 보았다.

연구과제 1: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동화주의인가? 다문화주의인가?(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과제 2: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동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

2.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제]를 탐색연구를 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한승준(2008)은 한 국가의 다문화 혹은 다인종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Inglis(1996), Kymlick & Banting(2006), Castles와 Miller(2003) 등과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이주, 교육, 고용, 문화 별로 해당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는 지표를 정책영역별로 나누었지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누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가 영역별로 개발한 지표를 개념을 기반으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차원으로 나누었다.

박진경·원숙연(2010)은 Castles & Miller(2003), Kymlick & Banting(2006), Inglis(1996)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동화주의의 지표로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등을 들었으며, 다문화주의로는 선거권 부여, 이종 국적 지원, 이종 언어 교육지원 강화, 고용우대조치를 들었다. 이들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차원은 나누어 졌지만 정책 영역별로 나누어지지 않아 다문화 관련 정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 영역별로 나누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의 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분석에서 임동진·박진경(2012)은 동화주의 정책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로 국적 취득 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강도 정도, 이주자 차별금지법제·개정 의 활성화 필요 정도, 이주자 사회적응 지원 필요정도를 사용하였으며, 다문화주의 정책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로 장기거주자의 경우 선거권 부여 필요 정도, 이종국적 허용 필요 정도, 이주자 자녀의 이종 언어 교육 강화 정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다시 다문화 관련 정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 영역별로 나누었다. 이외에도 김미나(2009), 한승준(2008), 박진경·원숙연(2010) 등에서 언급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특징을 비교한 개념 중 주요 내용을 다문화 관련 정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 영역별로 나누었다.

각 지표들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책 영역별로 나누어 정리 해보면 <표 4>에서와 같다.

〈표 4〉 선행연구에 따른 영역별 지표 분류

구분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이주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 및 국적획득 절차의 엄격성(○) • 이주민 관리의 엄격성(○) • 차별금지법 제정(△) • 국적 취득 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강도 정도(□) • 이주자 차별금지법제·개정의 활성화 필요 정도(□) • 이방인으로서 통합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부여(△) • 이종 국적 지원(△) • 장기거주자의 경우 선거권 부여 필요 정도(□) • 이종국적 허용 필요 정도(□) •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의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 채택수준(○) • 소수인종 언어교육 수준(○) • 이종 언어 교육지원 강화(△) • 이주자 자녀의 이종 언어 교육강화정도(□)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 없는 고용의 수준(○) 기회의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고용조치 수준(○) 고용우대조치(△) 결과의 평등(◇)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한국문화이해 강화(◇) 타문화 이해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의 수준(○) 대중매체에서의 인종 대표성 수준(○)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타문화 인정과 보호(◇)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이주자 사회적응 지원 필요정도(□) 	

자료: ○ 한승준(2008) △ 박진경·원숙연(2010) □ 임동진·박진경(2012) ◇ 김미나(2009) 재구성

이와 같이 연구자들에 따라 측정 지표가 다르며, 특히 차원과 정책 영역별로 분류를 통해 나누어 보았지만, 본 연구에 적합한 측정지표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표 5>에서와 같이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표 5>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측정지표

구분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이주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획득 절차의 엄격성a) 이주민 차별금지법 제정b) 외국인 관리의 엄격성 한국인으로의 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 부여d) 및 정책참여 이중 국적 허용e) 외국인 자체의 고유성 인정 외국인의 적극적 수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사회 적응 지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 언어 교육 외국인 차별 지원 교육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등고용 및 소극적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우대 및 적극적 고용지원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의 한국문화 이해 한국문화에 외국인 문화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문화 활동 지원 한국인의 외국인 문화 인정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수급권 확대c) 한국생활 적응관련 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적 복지서비스

주: a), b), c), d), e)는 관련 법령 등을 기반으로 한 유형화 분석 지표로 설문조사에서는 배제하였음.

3. 측정 대상 및 척도

<표 5>에서 제시한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의 추진과제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의 추진과제들이 동화주의 과제인지 다문화주의 과제인지를 이분법으로 분류하여 계량화 하였으며,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한 설문지도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항목을 만들었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해 이주적응(법률 관련 지표는 배제), 교육, 문화, 복지 관련 다문화정책 각각 2문항씩, 고용관련 다문화정책 각각 1문항씩을 만들어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scale)로 측정하였다.

〈표 6〉 분석수준별 조사대상과 표본추출 대상

분석수준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추출 대상
조직수준	중앙정부	•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추진과제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 ~2017) 추진과제	측정지표에 따른 내용분석	추진 과제
집단수준	지역사회	• 지역주민	측정지표에 따른 설문지법	전남지역 지역주민
개인수준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측정지표에 따른 설문지법	전남지역 결혼이민자

IV.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결과

1. 중앙정부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동화주의 정책을 추진하는지, 다문화주의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과제 1]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정책기본계획 146개 추진과제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84개 추진과제를 다문화 관련 정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 영역별로 분류한 후 <표 5>에서 제시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분석하였다.³⁾

[연구과제 1]의 분석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율이 42.0% 대 58.0%인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50% 대 50%로 나타났다. 이들 기본계획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영역별 정향성 분석 결과 과제 수와 비중

기본 계획	영역별 정책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업(개)	비중(%)	사업(개)	비중(%)
외국인정 책기본계 획 ^{a)}	이 주	43	49.4	44	50.6
	교 육	4	26.7	11	73.3
	고 용	1	9.1	10	90.9
	문 화	4	21.0	15	79.0
	복 지	8	72.7	3	27.3
	계	60	42.0	83	58.0
다문화가 족정책기 본계획	이 주	11	44.0	14	56.0
	교 육	5	50.0	5	50.0
	고 용	1	12.5	7	87.5
	문 화	15	71.4	6	28.6
	복 지	10	50.0	10	50.0
	계	42	50.0	42	50.0

주: a)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분류가 어려운 5개 사업 제외,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2개 사업은 중복 사용.

3) 예를 들어 이주적응 관련 다문화정책으로 분류된 개별 추진과제의 내용이 외국인 관리의 엄격성과 한국인으로서의 동화를 위한 과제인지, 외국인 자체의 고용성 인정과 외국인의 적극적 수용하기 위한 과제인지를 파악하여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정책영역별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모두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화주의(49.4%, 44.0%)와 다문화주의(50.6%, 56.0%)에 대한 추진과제의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은 외국인의 엄격한 관리와 외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동화를 시키려는 추진과제를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인 자체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추진과제들도 함께 시행하려고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둘째, 교육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다문화주의(73.3%) 과제들의 추진 계획이 더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50.0%)와 다문화주의(50.0%) 추진과제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중 언어 교육과 외국인 차별 지원 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육 사업들이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은 한국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 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육 사업들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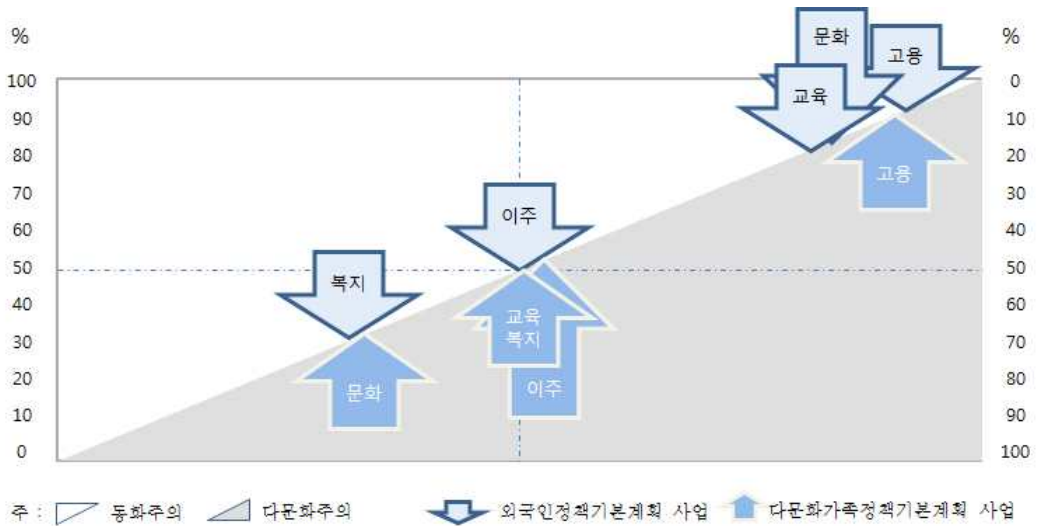
셋째, 고용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모두 동화주의(9.1%, 12.5%) 과제들보다는 다문화주의(90.9%, 87.5%) 과제들을 더 많이 추진해 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외국인들에게 고용 시 우대나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는 정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영범·남승연(2011)가 한국의 노동시장이 차별배제모형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문화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다문화주의(79.0%) 과제들의 추진 계획이 더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71.4%) 과제들을 더 많이 추진해 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이영범·남승연(2011)이 한국의 문화정책에서 다문화주의모형을 보인다고 언급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복지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72.7%) 과제들의 추진 계획이 더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50.0%)와 다문화주의(50.0%) 과제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한국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가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한국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차별적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영역별 정향성 분석 결과는 <그림 2>에서와 같다.

〈그림 2〉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영역별 정향성 분석 결과



2.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동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과제 2]를 분석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 대상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설문지의 경우는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는 285명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8%, 여자가 96.5%로 대부분을 여자가 차지하고 있다. 거주 지역은 시 지역이 53.3%, 군 지역이 46.7%로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6~30세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1-35세가 23.5%, 36~40세가 15.1%, 25세 이하가 14.4%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출신국가를 보면 중국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34.0%, 필리핀이, 22.8%, 일본이 2.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396명 지역주민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68.9%, 남자는 31.1%로 나타났으며, 지역이 시 지역인 경우가 68.9%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군 지역은 31.8%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1세 이상이 2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5세 이하가 19.2%, 36~40세가 15.7%, 46~50세가 14.6%, 41~45세가 14.1%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직업군을 보면 복지관련직이 20.2%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 18.2%, 주부가, 15.2%, 공무원이 12.9%, 전문직이 10.4%, 회사원이 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의 인구사회적 특성

결혼이민자(N=285)				지역주민(N=396)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5	1.8	성별	남자	123	31.1
	여자	280	98.2		여자	273	68.9
거주 지역	시 지역	152	53.3	거주 지역	시 지역	270	68.2
	군 지역	133	46.7		군 지역	126	31.8
연령	25세 이하	41	14.4	연령	25세 이하	76	19.2
	26-30세	93	32.6		26-30세	26	6.6
	31-35세	67	23.5		31-35세	38	9.6
	36-40세	43	15.1		36-40세	62	15.7
	41-45세	28	9.8		41-45세	56	14.1
	46-50세	8	2.8		46-50세	58	14.6
	51세 이상	5	1.8		51세 이상	80	20.2
출신 국가	중국	101	35.4	직업군	주부	60	15.2
	일본	8	2.8		복지관련직	80	20.2
	베트남	97	34.0		전문직	41	10.4
	필리핀	65	22.8		공무원	51	12.9
	태국	3	1.1		회사원	34	8.6
	몽골	5	1.8		학생	72	18.2
	러시아	0	0.0		기타	21	5.3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9〉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차이 분석

정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p)	
정책 통합	결혼이민자	동화주의	279	3.071	.511	-5.493 (0.000)
		다문화주의	279	3.247	.596	
	지역주민	동화주의	395	3.045	.388	-6.086 (0.000)
		다문화주의	395	3.242	.491	
이주 적응	결혼이민자	동화주의	283	2.802	.767	-4.081 (0.000)
		다문화주의	283	3.063	.951	
	지역주민	동화주의	395	3.197	.723	-4.462 (0.000)
		다문화주의	395	3.445	.764	
교육	결혼이민자	동화주의	285	3.582	1.029	8.723 (0.000)
		다문화주의	285	3.028	1.075	
	지역주민	동화주의	396	2.851	.817	-2.388 (0.017)
		다문화주의	396	2.952	.679	
고용	결혼이민자	동화주의	285	2.442	1.350	-11.551 (0.000)
		다문화주의	285	3.761	1.247	

	지역주민	동화주의	396	2.664	1.055	-5.012 (0.000)
		다문화주의	396	3.078	.963	
문화	결혼이민자	동화주의	283	3.461	.888	6.841 (0.000)
		다문화주의	283	3.037	.592	
	지역주민	동화주의	396	3.463	.779	9.045 (0.000)
		다문화주의	396	3.051	.558	
복지	결혼이민자	동화주의	283	3.056	.509	-4.223 (0.000)
		다문화주의	283	3.330	.993	
	지역주민	동화주의	396	3.046	.379	-15.104 (0.000)
		다문화주의	396	3.689	.779	

먼저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책들을 통합한 정책통합 다문화가족정책⁴⁾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화주의(3.071) 보다는 다문화주의(3.247)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서도 동화주의(3.045) 보다는 다문화주의(3.242)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 동화주의보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정책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화주의(2.802) 보다는 다문화주의(3.063)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4.081, p=0.000$).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서도 동화주의(3.197) 보다는 다문화주의(3.445)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4.462, p=0.000$).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을 동화주의라기보다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주적응관련 정책을 결혼이민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화주의보다는 결혼이민자 자체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교육관련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주의(3.028) 보다는 동화주의(3.582)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8.723, p=0.000$).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경우를 보면 동화주의(2.851) 보다는 다문화주의(2.952)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2.388, p=0.017$). 교육관련 다문화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동화주의보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는 오히려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교육적인 면에서 지역주민들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문화주의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생활습관 교육 등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동화주의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고용관련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화주의(2.442) 보다는 다문화주의(3.761)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11.551, p=0.000$).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서도 동화주의(2.664) 보다는 다문화주의(3.078)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5.012, p=0.000$). 결혼이민자와 지역

4) 정책통합 다문화가족정책 = Σ (이주적응+교육+고용+문화+복지)

주민 모두 고용관련 다문화정책을 동화주의라기보다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결혼이민자나 지역주민 모두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취업과정이나 취업 시 특별한 혜택이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문화관련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주의(3.037) 보다는 동화주의(3.461)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6.841, p=0.000$).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서도 다문화주의(3.051) 보다는 동화주의(3.463)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9.045, p=0.000$).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 문화관련 다문화정책을 다문화주의라기보다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이나 고용관련 다문화정책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결혼이민자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다문화주의 입장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음식에 대한 적응이나 한국문화(빨리빨리 문화, 효 문화, 정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동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복지관련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화주의(3.056) 보다는 다문화주의(3.330)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4.223, p=0.000$).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서도 동화주의(3.046) 보다는 다문화주의(3.689)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t=-15.104, p=0.000$).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 복지관련 다문화정책을 동화주의라기보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이나 고용관련 다문화정책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즉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주의 차원에서 통역, 자녀학습, 생활도우미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 받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결혼이민자)여성쉼터/상담센터 등을 이용하는데 다양한 문화적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다문화주의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차별적 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지원이나 예산확보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연구과제 1]과 [연구과제 2]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영역별 정향성을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영역별 정향성 비교

구분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결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설문조사	
			결혼이민자	지역주민
정책통합 다문화정책	동화, 다문화	동화,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	동화, 다문화	동화,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교육관련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동화, 다문화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고용관련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문화관련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동화주의	동화주의
복지관련 다문화정책	동화주의	동화,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V. 결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면 한국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동화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탐색조사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을 규명해 보았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인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는 사회통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여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화주의는 소수자를 새로운 자국민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 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혹은 문화 간의 불평등을 없애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한다. 이와 같이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본 연구의 분석이 이루어 졌다.

연구과제별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동화주의인가? 다문화주의인가? 에 대한 [연구과제 1]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율이 42% 대 58%인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50% 대 50%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본 계획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영역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i)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모두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었다. 즉 추진과제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ii) 교육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다문화주의 과제들의 추진 계획이 더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과제들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iii) 고용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모두 동화주의 과제들보다는 다문화주의 과제들을 더 많이 추진해 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문화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다문화주의 과제들의 추진 계획이 더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 과제들을 더 많이 추진해 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복지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 과제들의 추진 계획이 더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과제들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범·남승연(2011) 등의 연구에서 언급한 노동시장에서는 차별배제모형이, 그리고 사회정책영역에서는 동화주의모형이,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모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인식은 ‘동화주의’ 인식을 갖는지? ‘다문화주의’ 인식을 갖는지? 에 대한 [연구과제 2]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 다문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 정책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 이주적응, 고용, 복지 등과 관련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와 관련 된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

육과 관련 된 다문화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는 동화주의로, 지역주민은 다문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을 중앙정부, 지역주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은숙(2009)이 제시한 동화주의만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동화주의·다문화주의 등의 정향성이 혼재해 있었다. 이는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향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을 규명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정향성의 규명에 따라 다문화관련 정책영역별로 추진과제들이 재설계 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같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수혜자,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다문화가족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을 탐색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영역별로 나누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추진과제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는 다문화주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려면, 앞으로 중앙정부의 추진과제는 동화주의보다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과제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며, 결혼이민자들이 외국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결혼이민자(혹은 결혼이민자들 간)간에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나 프로그램(예를 들면,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초입단계에서 결혼이민자들 간 네트워크, 중기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 형성)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관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추진과제 중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주의로, 지역주민은 동화주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관된 성격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성격이 일정한 정책적 정향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갖고 있는 교육적 자원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주목해야 할 영역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고용관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추진과제, 결혼이민자, 지역주민 모두 다문화주의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관련 정책들이 비교적 제도화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문화관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추진과제 중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서는 동화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는 동화주의로 나타났다. 문화관련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화주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결혼이민자도 지역주민도 바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복지관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추진과제 중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는 동화주의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모두 다문화주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의 기획이나 전달과

정에서의 일정한 정책적 정향성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지역이 전남지역으로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문 대상도 전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나라 지역을 대상으로, 혹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을 포함 한 다문화가족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경우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로 번역을 하여 사용하였는데,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엄격한 검수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은숙. (2009).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지인문학」. 2: 27~49.
- 김미나. (2009).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기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연구」. 1(1): 126~149.
- 김선화. (2009).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 8: 31~56.
- 김태원·김유리. (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 마르티네엘로, 마르코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역). 서울: 한울.
- 박외병·임준태 (2013). 한국외사경찰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정책 정향성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191~224.
- 박외병·정명희 (2012). 「다문화 정책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진경. (2010). 「한국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진경·원숙연. (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 배성호. (2013).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50.
- 원숙연·박진경. (2009).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향성 탐색」.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16.
- 유도원. (201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이영범·남승연. (2011).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 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29~62.
- 전영평.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3): 9~27.
-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275~295.
- 정명주. (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1: 87~135.
- 정홍익·이종열·박광국·주효진. (2007). 「문화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조현상. (2009).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지종화·정명주·김도경. (2009). 한국의 다문화 국가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13(2): 109~136.
- 최무현.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51~78.
- 하선자. (2013). 「다문화가족으로서 새터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다문화 가족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 홍기원. (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 Castles, S. and M.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 NY: Guilford Press.
- Kymlick W. & K. Banting. (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Inglis C. (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 to diversity.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Policy Paper-No 4*. UNESCO.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www.index.go.kr>.

정장엽(鄭莊燁):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로는 사회복지정책, 다문화가족정책이며 발표논문으로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격분석 등이 있다(j-ustar@hanmail.net).

정순관(鄭淳官):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로는 정책이론, 복지정책이며, 발표논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주장의 혼재와 지역의 선택; 계약요인이 공공서비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공급 시장모형의 이론적 준거의 틀 등 다수가 있다. 주요경력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현),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장, 한국행정학회 전략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지역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chung@sunchon.ac.kr).

Abstract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Assimilation or Multiculturalism**

Jung, Jang-Youb
Chung, Soon-Gwan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in term of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research methods used a contents analysis and a utilized questionnaire survey for this study. The contents analysis targeted a drive polici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promoting foreign and multicultural family action plan. We surveyed 396 local residents and 285 married immigrants in Jeonnam area. Analysis results was as follows;

1. the drive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showed similar percentage encompasses of assimilation or multiculturalism in both policies. But, to look these policies by areas of policy, they did not show consistency.

2. Local residents and married immigrants who experience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generally recognized these policies as multiculturalism. But, by areas of policy, they also didn't showed consist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need to rearrange with concept of policy orient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